

일본 게이오대학 오코노기 교수와의 대담

: 김정일의 경제 개방, 성공할 것인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 政夫) / 일본 게이오대 교수

윤덕민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윤덕민 북한 외교부는 최근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강요할 경우 제네바 합의를 폐기할 것임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국형 강요로 인하여 경수로 공급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5MW 원자로의 연료봉 재장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코노기 교수께서는 최근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코노기 저는 현재 상황을 조작된 위기로 봅니다. 즉 북한이 일부러 위기를 조장하는 가운데 경수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형'이라는 경수로 명칭이라든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봉쇄하여 최종적으로는 북미 양자에 의해 문제를 처리하고 그와 같은 문제해결 방식을 안보문제에까지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반대급부도 경수로 문제를 통하여 얻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조건투쟁이며,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연료봉을 재장전하려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오해, 오산, 허세 등에 기인한 '기술적 착오'일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제네바 합의를 통해 확보된 정치경제적 실리를 저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무기한 연장시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수로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어느 선까지 심화될 경우, 어떤 형태이든 남북대화를 재개시키거나, 카터 전대통령이 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관계를 중재하는 선에서 위기가 회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에 카터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미 관계개선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전한 바 있는데,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정권으로서는 김일성의 유언인 셈입니다.



윤덕민

윤덕민 저도 오코노기 교수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트로이의 목마’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진, 선봉에 대한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볼 때,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에 따른 북한사회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당국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경수로 수용 거부와 관련한 최근의 사태는 협상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과거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에 관해서는 쉽게 합의해 주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걸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합의 이행을 공전시키거나 새로운 반대급부를 쟁기는 모습을 종종 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은 향후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최대한 거부하는 가운데 이를 자렛대로 하여 세네바 합의와는 별도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쟁기고 가능한 한 경수로 도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절저히 차단하여 한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한 형태의 경수로를 받아들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결국 한국이 무엇을 주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오코노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양상은 두가지 차원을 날리하는 3자개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큰 3자개입이 있으며, YS·DJ·김정일 사이의 작은 3자개입이 존재합니다. 특히 작은 3자개입은 한국의 국내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바야흐로 선거정치의 계절이 도래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방선거, 내년에는 총선, 그리고 1996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내의 움직임을 보면 1996년 대선의 이슈는 통일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선 캠페인의 이슈가 통일문제로 흐르는 것은 결코 마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북한에게 찬스를 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윤덕민 김정일 정권의 공식적 출범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코노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

특별기획

“김일성 사망
1주기로부터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60주년까지의
기간동안 공식출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염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권력투쟁 혹은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등이 보도되기도 합니다만.

오코노기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몇가지 관측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관측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회복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김일성의 시체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후계정권의 출범도 늦어진다는 설도 있고, 김정일이 효자임을 부각시켜 후계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을 추진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극적인 등장효과를 노리는 연출이라는 설입니다. 즉 경수로 문제, 북미 관계개선 등에서 혁혁한 외교성과를 이룩하여 이를 바탕으로 극적인 시기에 정권을 출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관측들 가운데 진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김일성 사망 1주기로부터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60주년까지의 기간동안 공식출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정원의 북한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내부 권력투쟁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현재 김일성 생전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책의 높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대미, 대일, 대남정책과 경제정책을 뛰돌아 볼 경우 명백할 것입니다. 또한 지도부의 인사와 통정에서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파도기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정일이 북한사회를 상당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김일성 사후 군과 당비서국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것도 국방위원회와 당비서인 김정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덕민 최근 북한의 1994년 중앙년감에 인민무력부가 정부원하에 위치되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코노기 저는 과대평가하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상은 오히려 역으로서 앞에도 지적했지만 군의 위상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윤덕민 북한은 지난 5년간 매년 5%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여 5년전에 비하여 경제력이 거의 25% 이상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는 봉고 전야의 소련에 비유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북한정권도 경제재 친없이는 체제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정권으로서는 획기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엄격한 정경분리에 입각하여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북한경제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나진, 선봉 등에 자유경제구역지대를 설정하는 등 나름대로 북한식 개방정책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외부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으로 북한의 개방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저는 비관적입니다.”

오코노기 북한은 1993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경제관계의 전환과 경제자립성 강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정한 바 있습니다. 대외경제개방과 경제자립성의 강화는 매우 보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에 있어서 초기 예를 보면 현재 북한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것 입니다. 중국과 베트남도 개방 초기에는 이데올로기 강화를 표방하는 등 상당한 세한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개방도 실은 현체제하에 경제를 재건하고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개방도 어느 단계까지 진입한 후가 아니면, 체제개혁의 일정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개방을 시작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라는 자본 및 기술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일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수십억 달러의 외자가 북한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일단 개방을 시작하면 북한당국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스피드로 개방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으로 북한의 개방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저는 비관적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자본과 기술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능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30년전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유능한 지도자와 경제관료

특별기획

“서는 경기회복을
북한은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에 성공할
기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가라는 3박자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특수가 좋은 기회를 제공했고 미국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전반에서 여전히 정치가 우선되며, 경제관료라고 하여도 시장경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시장의 개척도 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외자가 도입될 경우 반짝 경기가 있을 수 있지만, 돈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예상외로 유동하고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잘 활용했다고 할 경우입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비판적입니다. 성공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대외교류가 확대될 경우,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하려고 하는 일은 정치는 후퇴하면서 경제를 전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김정일의 계승과정으로 더욱 왕조적으로 되어가면서 경제개방과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은 모순을 표면화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서는 상기적으로 북한이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윤덕민 한국에서는 북일수교에 따라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을 따돌리고 먼저 북한에 진출하여 발판을 구축하려 한다는 의심을 갖는 분들이 적지않은 실정입니다만,

오코노기 저는 남북교류와 북일교류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북한에 투자되는 자본에 있어서 일본자본은 주로 배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적인 자금이며 한국의 자금은 상업적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상업적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할 경우, 걱정되는 것은 역시 북한의 비약한 인프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자본은 주로 북한의 인프라 정비에 쓰여질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일본기업은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면서까지 위험 부담(contrary risk)이 큰 북한에 진출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이 제공한 자본은 주로 고속도로, 춘천댐과 포항제철과 같은 인프라에 투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자본이 북한

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한국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시장을 개척하는 식으로 한일 역할분담으로 대북 투자가 이루어 진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성공은 결국 북한경제의 자립적 기반을 해치고 체제전환을 촉진시키겠습니다만.

윤덕민 현재 한국에서는 김정일 정권이 의외로 장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아래 김일성은 경제파탄, 박재고립과 고사관형의 불리한 추세 등 죄악의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권 붕괴의 영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온 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일성은 해카드를 적극 활용하여 제제생존의 틀을 마련하여 했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의해 그리한 틀을 갖출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단 성공했다고 평가됩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염두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서방으로부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함으로써 고립탈피와 경제재건의 노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부이지만 미국의 NSA보장(핵선제 불사용)과 함께 향후 상당기간 핵보호성(핵폭탄 1~2개 보유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사적 안전보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소위 자본주의 해동에 의한 체제붕괴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전략환경을 조성하는데 일단 성공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김정일 정권이 세네바 합의에서 확보된 정치경제적 급부를 잘만 이용한다면 장기집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코노기 생존을 위한 북한정권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 및 국내적 조건을 달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생존을 위한 국제적 조건은 대미 및 대일 관계개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리한 위치에시의 남북관계 재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약 10년간 보장된 핵카드를 이와 같은 국제적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한편 국내적 조건은 여하히 체제의 변화없이 경제부흥을 일으키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 북한정권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경제

특별기획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북한정권은 체제유지력이 있다고 봅니다. 개방, 개혁에 성공도 실패도 없이 장기적으로 정체하는 상태하에서 김정일 정권이 유지될지도 모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경제개방이 불가피하며, 경제개방이 현 체제에 대한 영향없이 진행될 리는 없고 결국 경제개방은 체제의 혼란, 나아가서는 리더쉽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저는 북한정권의 향방에 대해 전반적으로 볼 때 비관적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체제가 끝방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북한정권은 체제유지력이 있다고 봅니다. 개방, 개혁에 성공도 실패도 없이 장기적으로 정체하는 상태하에서 김정일 정권이 유지될지도 모릅니다. 지도부의 수행능력에도 좌우되겠지만 … . 북한정권은 식량문제 등 특히 열악한 상황하에서도 10년 이상의 지구력을 발휘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유진리교’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로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북한은 일종의 ‘종교국가’라는 점을 새삼 떠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체제의 지구력은 종교적 신앙과 단결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유진리교 신자는 종교적인 신념으로부터 1일 2식의 조식(粗食)을 참고 있습니다.

윤덕민 만일 김정일이 실각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체제로 새로운 지도체제가 대두되고, 한국과 거리를 눈 채 사회주의체제가 상당기간 존속될 가능성도 의외로 높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오코노미 교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통일의 경험을 보면, 현재 북한의 지배계급을 구성하는 약 3백만의 기독층은 한국에 흡수되어 기독권을 잃기 보다는 어렵지만 현 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실각이 곧바로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은 가능성도 높은 것이 아닐까요?

오코노미 현재 북한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북한체제에 있어서 최고지도자, 정치체제, 국가는 일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는 체제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것은 교주를 잃은 신홍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체제 자체가 인격화되어 있어 김일성 일족 외의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정일의 건강으로 인하여 후계작업이 실패할 경우, 북한체제는 외부압력 없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2인의 최고지도자를 계속

해서 잃은 국민의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며, 신흥종교에서 교수가 없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주의 자리를 놀라싸고 권력투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하튼, 김정원의 경우와는 달리, 다음 후계자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덕민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할 것임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북한은 '남조선 해방론'에 입각한 낙한정부 신복 공작을 재시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북한은 북미협상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비효율적이고 고립된 한국정부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다차원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정부와의 대화는 계속 기부하면서도 한국기업이나 재야와의 대화를 제안하거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시킨 북미 군사협상을 동의하도록 혁카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코노기 저는 남북대화와 관련한 최근 북한의 정책은 경경분리와 관민분리라는 두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정도로 집요하지만, 결국 북한이 아직 남한에 대한 체제간 경쟁을 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 해방'은 이론적 목표이자 현실적 목표는 아닐 것 입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한의 정치 분열을 촉진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재건에 남한의 경제력을 활용하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게 불운했던 것은 카터 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한 후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해 버린 일입니다. 그 결과로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절한 채 북미회담을 타결자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덕민 북한은 최근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한반도의 적

화를 이루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만, 남북간의 국력의 차가 상당한 현상황 속에서 북한의 의도가 그런 것이라면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착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요구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립 내지는 등거리적 입장을 취해 달라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목표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코노기 북한은 스스로 판문점 정전위원회로부터 철수했을 뿐 아니라 중국까지 철수시키고, 폴란드를 중립국 감시위원회로부터 철수시켰습니다. 요컨대 정전기구를 해체시켜 그 공백을 북미 평화협정에 의해 메꾸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안보시스템의 재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외교안보면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여 미국을 죽으로 하는 안보보장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요구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립 내지는 등거리적 입장을 취해 달라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목표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같은 제3자적 성격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소련 해체 이후 안보면에서 가장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국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습니다. 남북 유엔동시가입도 따지고 보면 중국이 한국의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NPT탈퇴 선언 이후 대북제재 논의에서 중국은 거부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요한 국면에서 중국은 북한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일성은 죽기 얼마전 미국을 죽으로 하는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덕민 최근 한국외교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오코노기 냉전종결과 제네바 합의는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를 자명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친미’정책에 반대하면 한수록 한국의 외교정책은 유연성을 잃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만일 그것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면, 본래의 목적은 않고 북한과의 관계도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을 새로운 국제시스템 속으로 포용해 가는 것입니다.”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을 새로운 국제시스템 속으로 포용해 가는 일입니다. 저는 언젠가 북미 및 남북간의 두가지 정치군사회담의 병행적 추진(변칙 3자회담)이 제기되어, 그것이 남북정상회담 구상과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이스라엘간의 캠프 데이빗 합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 의한 보증’은 무엇보다도 남북당사자간의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병력감축을 포함한 신의 조성 조치가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3자간 합의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보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는 캠프 데이빗 합의 이상으로 종종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한반도 평화의 열쇠는 남북당사자 합의의 원칙과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키나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윤덕민 경수로 문제 등으로 조금 미묘한 시기였습니다만, 일본의 연립여당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해 수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북일관계를 전망해 주신다면?

오코노기 북일수교 움직임은 사실 북미 세네바 합의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북미교섭에 맞춰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연립정권 의원단의 방북은 그 타이밍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국내정치 역학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번 방북은 가또 자민당 정조회장을 중심으로 고노 외상, 실력자인 와타나베 의원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는 정권차원의 고려가 있었나고 생각됩니다. 즉 포스트 무라야마정권을 향해 정치권에서 외교적 득점을 올리려는 의도가 배후에 작용했다고 봅니다. 정치 레벨에서 추진되다보니, 외부성 등 관료가 이를 견제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북일협상은 결국 세네바 합의와 북미협상에 따라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남북대화 재개와도 연계시켜야 하지만, 일단 경수로 문제가 일단락되면 북일협상이 국제문제로부터 경제문제로 진화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윤덕민 장시간 대답에 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